

IV. 주요 경제 현안

1.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

기존 정책 기조 유지, 물가·노동 문제에 적극 개입 예상

-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물가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할 것을 시사함
 - (특징) 고비용 구조의 문제점으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정리 해고제, 근로자 파견제, 변형근로시간제의 추진을 예고함
 - (문제점) 물가와 국제 수지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함
 - 물가 문제의 경우, 지표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개입을 시사하고 있어 시장 질서 교란이 우려됨
 - (개선점) 정책수립·운영에 있어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
 -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문제 인식 가져야 함
 -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바탕을 둔, 시기 적절하고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요구됨

<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 및 정부 목표 >

(단위 : 억 불, 전년동기비 %)

	1994	1995	1996		
			상반기	하반기	연간
경제성장률	8.6	9.0	7.5	7.0	7.0~7.5
소비자물가 상승률	5.6	4.7	3.8	4%대	4%대
경상 수지	-47.8	-88.2	약 -90	-20~-20	-110~-120
통화 증가율(M ₂ 평잔)	15.6	15.5	14.6	-	15.5

주: 물가는 전년말 대비

2. 경제 위기론의 실체

- 급격한 경기 침체에 의해 국내 경제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음
 - 그러나 7%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현 경제 상태를 위기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임
- 국내 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요 거시 지표의 등락에 있다기 보다는 성장 내용의 부실함과 금융 시장의 난조 그리고 정책 운영의 혼선에 있음

성장 내용의 부실함	(거시적 측면) - 산업간 성장의 불균형 심화 · 체감 경기 악화의 근본 원인 -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 · 물가 상승과 성장 잠재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- 개인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 · 94년 개인 저축률이 33.0%, 95년엔 29.9% · 무역·무역외수지 적자 확대와 대외 부채 증가 - 경기 둔화 속 경상수지 적자 확대 · 96년 경상수지 적자는 11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 - 내년 경기 전망 불투명 (미시적 측면) - 반도체, 철강, 자동차와 같은 수출 주도 품목들의 경기 악화
금융 시장 난조	- 증시 침체 - 금리 상승세로 반전 - 원/달러 환율의 고평가
정책 운영 혼선	- 경기 예측 능력 취약 - 개방 경제하 거시 정책 대응 능력 취약 - 계획보다 빠른 금융 시장 개방 - 급진적이고 비밀관된 노사 관계 정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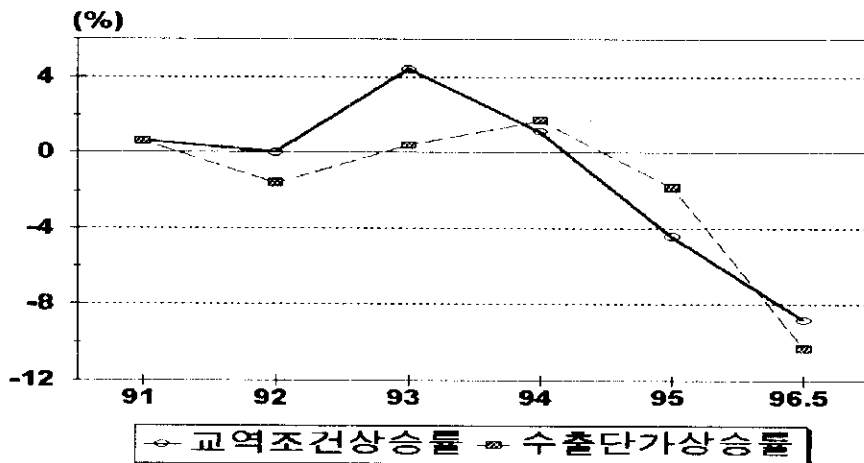
3. 경상수지 적자 심화

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 증가

○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증가

- 우리나라의 교역조건(수출단가/수입단가)이 93년 이후 악화 추세로 반전되어 96년 5월에는 -8.8%를 기록
- 96년 5월에는 수입단가가 1.6% 하락하였으나 수출단가는 중화학 공업(14.9%)을 중심으로 10.3% 하락

<교역조건 추이>



자료: 한국은행

주: 교역조건 = 수출단가 / 수입단가

- 무역수지 적자(통관기준)를 수출입 물량과 교역조건 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, 95년 이후의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조건 악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

<교역조건 변동과 무역수지 적자의 상관 관계>

(억 달러)

	93	94	95	96. 1~5
무역수지	-15.6	-63.4	-100.6	-73.8
물량 요인	-51.7	-74.2	-49.9	-39.1
교역조건 요인*	36.1	10.8	-50.7	-34.7

주: *는 (수출금액 - 수입금액) - (수출금액/전년기준 수출단가지수 - 수입금액/전년기준 수입단가지수)

여행수지 악화에 의해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

○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에 의해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

- 경상수지 적자 중 무역외수지 비중이 95년 5월 까지 누계로 24.4%였는데 96년 5월에는 36.9%로 상승
- 무역외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
 - 선진국에 대한 기술 용역 대가 지급 증가
 - 소득 증가와 해외 여행 자유화에 의한 여행 경비 지출 증가
 - 무역 규모 증가에 의한 운송비 부담 증대에 의한 것임
- 한편 OECD 가입이 실현되는 경우에 이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

< 경상수지 추이 >

(단위 : 억 달러)

	95. 5.	95. 1~5.	96. 5.	96. 1~5.
경 상 수 지	-7.9	-50.7	-14.4	-81.1
무역수지	-5.8	-37.4	-7.9	-46.9
수출	106.5	466.4	113.4	535.5
수입	111.3	503.7	121.3	582.4
무역외수지	-0.7	-12.4	-5.6	-29.9
운수서비스	-3.5	-16.7	-4.8	-22.5
여행	0.1	-3.0	-2.2	-9.3
기타 용역	1.2	1.3	0.2	-6.2

對개도국 무역수지
큰 폭 흑자, 對선진
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

- 지역별로는 對개도국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對선진국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로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
 - 對선진국 수출이 5월 누계로 7.0%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29.35% 증가에 비해 22.3%포인트가 하락
 -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요인
 - 對개도국 무역수지는 중화학공업 상품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흑자 규모가 확대됨
 - 95년 5월 누계 67.3억 달러에서 96년 5월에는 79.3억 달러로 증가

<지역별 무역수지 추이>

(억 달러)

	95. 5	95. 1-5	96. 5	96. 1-5
대 선진국	-30.2	-131.7	-33.7	-153.1
· 미국	-8.1	-32.1	-10.0	-43.2
· 일본	-16.0	-67.1	-12.4	-60.3
· EU	-3.5	-15.4	-4.6	-15.3
대 개도국	18.5	67.3	20.1	79.3
· 동남아	18.6	70.9	17.1	80.7
· 중국	0.6	5.1	1.8	9.8
· 중남미	3.2	15.9	3.6	14.2

주: 통관 기준임

주력 수출 품목 수출
큰 폭 하락

- 품목별 수출을 살펴 보면 주력 수출 제품들이 증가율면에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
 - 4월 이후 전자 제품, 화공품, 금속 제품 등 주력 수출 제품이 수출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가 확대

<품목별 수출 추이>

(억 달러, %)

	95. 5	95. 1-5	96. 5	96. 1-5
중화학 제품	73.0(44.0)	470.0(32.7)	75.2(3.0)	370.5(15.0)
· 전자제품	20.8(48.1)	92.2(42.5)	19.4(-7.0)	107.0(16.1)
· 화공품	6.3(81.5)	30.5(83.1)	5.3(-15.3)	29.7(-2.7)
· 자동차	6.8(59.9)	34.6(65.7)	9.5(39.9)	43.8(26.6)
· 기계류	11.5(38.1)	50.6(33.7)	12.9(12.1)	60.8(20.1)
· 금속제품	10.4(73.5)	41.6(39.7)	6.5(-37.5)	30.5(-26.7)
경공업 제품	26.5(18.3)	117.4(17.2)	30.0(13.4)	130.2(11.0)

주: ()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
소비재 수입 큰 폭 증가

○ 용도별 수입을 살펴보면 자본재,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소비재 수입은 높은 증가세 유지

- 자본재는 작년 5월 누계 40.2% 증가에서 8.2%로 하락
- 원자재는 작년의 34.7%에서 17.5%로 증가세 반감
- 소비재는 소득 증대와 대외 개방 확대로 96년 5월 누계로 21.7%의 높은 증가세 유지

<품목별 수입 추이>

(억 달러, %)

	95. 5	95. 1-5	96. 5	96. 1-5
자본재	46.9(34.9)	212.8(40.2)	48.1(2.5)	230.2(8.2)
· 기계류	20.9(60.1)	94.6(54.1)	21.0(0.4)	99.4(5.1)
· 전기/전자	16.8(38.7)	75.5(45.3)	17.6(4.6)	85.3(13.0)
· 수송장비	3.8(-30.5)	17.1(7.6)	3.9(4.3)	18.3(6.6)
원자재	58.6(42.7)	267.2(34.7)	64.5(10.1)	314.1(17.5)
· 원유	9.4(48.4)	45.1(36.4)	10.1(7.3)	52.9(17.3)
· 화학제품	7.7(44.0)	33.9(35.1)	7.9(2.0)	36.2(6.8)
· 철강	5.3(21.6)	21.9(10.3)	6.4(19.9)	30.9(41.3)
소비재	12.7(44.7)	54.4(33.9)	14.3(12.3)	66.1(21.7)

주: ()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

4. 연중 물가의 불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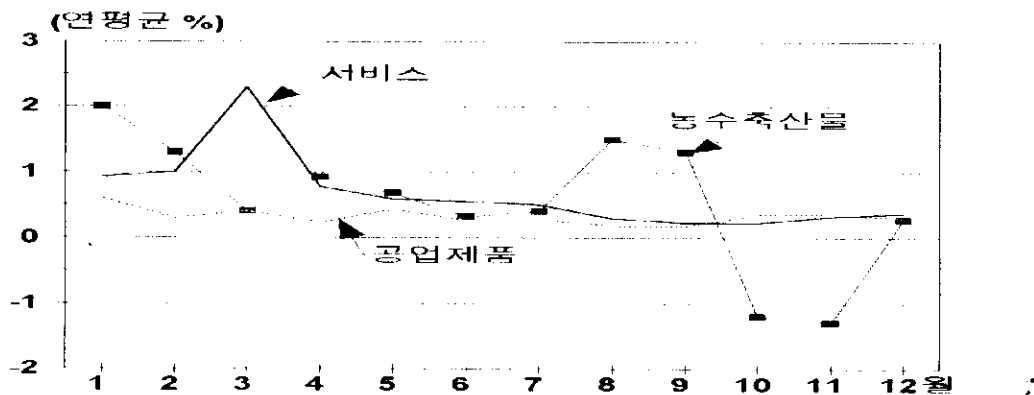
연중 물가의 불균형은 물가 문제의 주요 현안

- 연중 물가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더불어 물가 문제의 주요 현안임
- (농수축산물) 본격적인 출하시기인 4/4분기에는 크게 하락하는 반면, 4/4분기를 전후한 1/4분기와 3/4분기에는 크게 상승함
- (공업제품) 비교적 연중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
- (서비스) 1/4분기에 물가 상승이 집중됨
 - 1/4분기는 각종 요금의 인상폭 결정 시기이며, 특히 3월에는 등록금 인상이 집중되면서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로 나타남
 - 전년도에서 인위적으로 이월된 물가 압력도 불균형을 심화시킴

연중 물가 불균형 개선도 경제 선진화의 중요 과제

- 연중 물가의 불균형 개선도 경제 선진화의 중요한 과제임
- 물가 상승 압력의 불균형은 소비자의 물가 심리를 불안하게 만듦
- 또한 시장 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함
- (대책) 인위적인 물가 개입의 배제하고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물가 불균형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함

< 부문별 연중 물가 상승률 (1990~1995) >



5. 노사 관계의 불안정

96년 상반기 분규 대
형화, 장기화 추세
재등장

○ 96년 상반기 노사 분규의 대형화, 장기화 추세
재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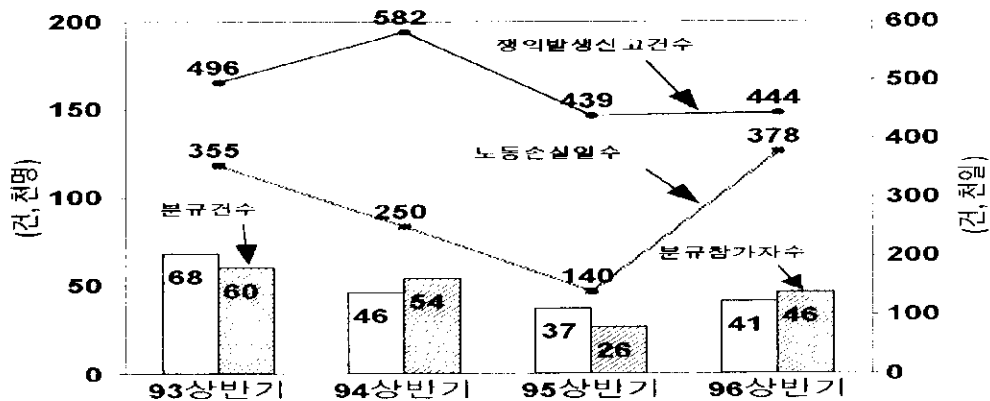
- 96년 상반기의 분규 건수(37 →41), 쟁의 발생 신고 건수(439 →444) 증가는 미미하였음
- 그러나 노동손실일수와 분규참가자수는 각각 74.5%, 170.4% 증가
- 근로 시간 단축, 작업 중지권 등 단체 협약상의 쟁점 사안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임

96년 하반기 노사 관
계 안정의 큰 흐름
유지, 일부 불안정
요인 상존

○ 96년 하반기 노사 관계는 안정의 큰 흐름은 유
지할 것이나 불안정성의 가능성 또한 높음

- 근로시간 단축, 작업중지권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상의 쟁점사안이 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될 것임
- 공공부문에서의 해고자 복직 합의는 하반기 노사 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것임

< 노사분규 관련지표 동향 >



자료: 노동부

하반기의 노동법 개정
 정에 대한 노사 상반
 되는 입장

-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법 개정에도 있어서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게 존재
- 지난 7월 2일 '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'에서 정부가 근로자파견제, 정리해고제,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강력히 천명함
-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에서도 노사관계 개혁 과제에 이 제도들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나타냄
- 이에 대한 민노총,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
- 복수노조 금지, 제3자 개입금지 등에 대한 민노총의 적극적인 개정 요구도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임
- 단, 경기 하강 국면, 국제적 경쟁 격화라는 경제상황과 공공부문 노사협약의 원만한 타결, 민노총의 합법화를 위한 온건 성향 표출 등의 요인으로 노사관계 안정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임
- 분규 건수, 쟁의 발생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나 노동손실일수와 분규 참가자수의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임

97년 노사관계 안정
 화 추세의 큰 흐름
 지속 전망

- 97년에도 노사관계의 안정화 추세라는 큰 흐름은 계속될 것임
- 단, 노동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단기적인 행태는 크게 달라질 것임

노사 관계 안정화 요인	노사 관계 불안정화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기하강과 국제적 경쟁격화의 경제적 요인은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어렵게 만듦 ·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교섭에서의 유연한 대응 확산 · 노사화합의 흐름 확산 ·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민노총의 제도내 흡수, 온건화 추세 강화 ·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요인, 강성투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 지불능력의 한계 · 경영참가, 해고자 복직 등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대립 격화 · 정리해고제, 변형근로시간제 등이 도입될 경우 이의 시행을 단체협약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노조측 시도 · 민노총의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노총 내 강성 세력의 득세와 투쟁 강화 가능성 존재

6. 연내 OECD 가입

OECD 가입은 주로
금융 부문의 많은 부
담과 변화를 줄 것임

○ OECD 개관

- OECD는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간 클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관여하고 있으나 주로 금융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
- WTO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특히 무역 부문의 경제 질서에 관여하고 있음
- 최근 OECD는 헝가리, 폴란드 등을 가입시켜 체제전환국의 공산주의 부활을 견제하는 등의 정치적 경향도 나타내고 있음

○ 가입 추진 현황

- OECD가입의 최종관문격인 양대 자유화규약위원회(CMIT/CIME)를 통과하여 금년내 가입이 확실시됨
- 9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해 오며 보험, 해운, 금융시장,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(CMIT),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(CIME), 재정, 환경, 노동, 농업, 경제발전, 무역 등 11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
- OECD에 제출한 일정에 따른 조기 개방이 불가피함
- 금융시장의 개방일정이 2년 앞당겨 졌으며 수입선다변화제도도 99년에 완전 폐지 예정

○ OECD가입의 영향

- 자본자유화 등으로 인한 거시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 증대
- 금융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금융 부문의 잠식
- 노사, 환경, 뇌물수수 및 부패 부문 등의 각종

- 제도 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문제점들이 표출 될 것임
- 복수노조 및 제3자 개입허용 등에 대한 사안은 여전히 잔류
 - 환경 및 농산물 시장 개방 협약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나 국내 기준은 대폭 강화 될 것임

< OECD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의 주요 정비 내용 >

분야	개편 내용
소비자 보호	- 제조물 책임제 입법화와 리콜 제도 확대
환경	-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,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등 연구 시설 및 기술이 부족한 12개 부문은 조건부 수락 -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도 개도국 지위 유지 요청
노동	- 「新노사관계구상」에 의거 노조의 정치 활동 허용, 제3자 개입과 복수 노조 금지 조항의 변화
저시정책	- 통화 정책을 공개 시장 조작 등의 간접 규제 방식으로 전환
무역	- 수입선 다변화 제도 99년 완전 해제
자본이동	- 채권 시장 개방은 국내외 금리차가 2% 내외일 때 개방 - 외국인의 간접 채권투자 대폭 확대 허용. 채권 시장 완전 개방의 전단계로 간접 투자의 창구로 「채권형 컨트리 펀드」를 발행하여 단계적 개방 - 해외 증권투자 전면 자유화. 개인 5억원, 일반 법인 10억원 투자한도 폐지
외국인 투자	- OECD측에서 개방 수준에 불만을 표시. 95년 11월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, 개방 수준을 앞당겨 확대 예정 - 기존 외자도입법 폐지 -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및 공장부지 지원 강구 - 거시 안정 기조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시장 보다는 외국인투자부문의 자유화가 빨리 진행될 것임

기업의 다방면에 걸친 대응이 요구됨 ○ 기업의 대응 과제

- M&A 허용
 - 97년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우호적인 M&A가 가능하며 국내기업끼리는 적대적인 M&A도 가능 예상
 - 향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인 M&A에도 대비하여 기업 재무 구조의 선진화 필요
- 자본시장 개방
 - 해외 자본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
 -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외환 및 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 강구
- 노동
 - 복수노조 및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민감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협의 될 예정
 - 정리해고제 등 노동 관계법이 개정되는데 따른 신노사관계의 확립 시급
- 환경
 - 오염자 부담 원칙,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, 유독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법령 정비 등으로 기업체들의 환경 비용이 증가할 것임
 -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기업 문화 정착을 서둘러야 함
- 건설
 - 98년부터 민간건설 부문의 완전 개방
 - 첨단 공법이 필요한 플랜트, 해저터널 등 고부가 기술의 개발 시급

7. 자유 변동 환율 제도 도입

자유 변동 환율 제도 도입은 환율의 변동성 증대

- 96년 하반기 이후 97년까지 환율 제도의 개편이 예상됨
 - 96년 10월 중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 엔/원화의 거래가 가능
 - 97년 중에는 현재의 일일 환율 변동 허용 폭이 폐지되고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로의 이행 예정
- 환율 제도의 개편은 환율 결정의 시장 기능을 높이지만 환율 변동성을 증대시킬 것임
 - 환율 변동성 증대는 장기 투자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기업의 환차손을 증가시킬 것임
 - 특히 환율 변동성 증대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은 정부의 통화금융 정책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

<96~97년 환율 제도 개편의 영향>

구분	예상 시기	긍정적 영향	부정적 영향
원/엔 시장 개설	1996년 10월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은행은 국제 외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원화와 엔화의 거래 가능 - 원/엔 환율의 독자적 가격 기능 회복으로 엔/달러, 원/달러 환율의 급변에 영향을 적게 받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원/엔 시장 환율과 재정 환율간의 이중 가격 형성 우려 · 당분간 원/엔 환율을 재정 거래를 통해 결정
자유변동 환율제도	1997년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/달러 환율의 시장 기능 제고 · 미달러화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반영 - 투기성 자금 유출입 축소 기대 · 일일 변동 허용폭 폐지는 환율 예측을 더욱 어렵게하여 투기적 자금 유출입 축소 예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율의 변동성 증대 · 환위험 상승에 의한 장기 투자 자본의 유입 억제 · 기업의 환차손 가능성 증대 · 정부 정책의 혼란 가중 - 균형 환율에서 장기간 이탈 가능 ·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대

8. 새로운 통상 이슈

(1) WTO의 신라운드

- UR협상에서 이월된 중점 협상 논의들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대두
 - 각 의제의 내용과 포괄 범위에 대한 협상

	WTO 신규법		
	환경-무역의 연계	다자간투자협정	무역과 경쟁 정책
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서 무역-환경의 연계에 대해 보고 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96년 OECD 각료 이사회에서 97년 각료이사회까지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투자 협정(MAI) 협상의 즉각적인 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WTO내에서 각국 반독점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여 향후 협상에의 기초 자료 마련 중임
쟁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위해성 규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다자간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연계 · WTO 내 논의는 이견으로 진전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국 경쟁 정책의 단일 규범화를 목표로 함
전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산 과정이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에 그 제품까지 환경 규제에 포괄시키는 것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짐 · 개도국의 반발 심화 · 개도국을 제외시키고 부분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96년 우리의 OECD 가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MAI 가입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. 이럴 경우에 국내 경제 개방의 가속화가 이루어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재 각국간 심한 이견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다자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2국간 쌍무 협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 예상됨

(2) ISO 14000 시리즈(국제 환경 경영 인증 규격)

국제표준기구(ISO)에서 환경보호기업 상품임을 인증하는 제도

○ 개요

- 국제표준기구(ISO ;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)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인증 절차
- 기업의 경영자가 환경 보전 및 관리를 경영의 목표로 채택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외부 환경 감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환경 보호 기업의 상품임을 인증하는 제도

모든 업종의 기업에 적용

○ 목적 및 대상

- 목적 : 기업의 환경 경영 체제와 활동이 지구 환경 보호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공식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산업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
- 대상 :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병원, 백화점, 건설업, 해운업 등 모든 업종의 기업

96년 9월부터 ISO의 공식 규격 채택 확정

○ 최근 동향

- 96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ISO 환경경영기술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ISO 14000 시리즈가 96년 9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공식 규격으로 채택이 확정
- 93년 이후 추진되어 온 ISO 14000 시리즈가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국제 규격으로 정식 채택되어 Green Round 시대로 진입
- 이번에 채택된 규격은 크게 환경 경영 시스템(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)과 환경 감사(Environmental Auditing) 규격으로 구분
- 일반 규격인 14001과 보조 규격인 14004는 환경 경영 시스템(EMS)규격에, 감사 일반 원칙인 14010, 감사 절차 규격인 14011, 감사자 자격 기준인 14012 등은 환경 감사(EA) 규격에 포함됨

- 또한 국제표준화기구는 중소기업형 환경 경영 규격인 ISO 14002를 별도로 제정하기로 결정
- 이 규격은 중소기업의 특수 사정을 감안, 14001 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중소기업이 14002를 획득할 경우 14001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
- 14002 규격 제정은 97년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98년 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

○ 파급 효과

구분	긍정적 효과	부정적 효과
법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직의 자율적 환경 관리 강화에 따라 행정 규제 억제 · 관료적이거나 사무적인 각종 불필요한 행정 요구 최소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법규(환경 법규, KS 규격) 개정시 혼란 예상
통상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간 규격 통일로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단일 관리 체제에 따른 무역 장벽 최소화(선진국 진출 기회 확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진국의 인증 요구가 관례화 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
기업 이미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기업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기회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 미취득시 공해 기업 이미지
비용 측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별 국별 환경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가능 · 인증 획득시 국제 경쟁력 확보(비가격 경쟁력 측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적인 비용, 시간,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기술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 무역 장벽에 의한 국내 산업 활동 위축

주 : 긍정적 효과는 주로 인증 획득 추진시 및 획득시, 부정적 효과는 주로 인증 미취득시의 파급 효과임

(3) 한미 통상 관계

○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통상 관계 악화 우려

한미통상관계	
배경 요소	대통령 선거와 통상정책 : 대통령 선거에 효과를 주기 위해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쌍무적 통상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.
현황	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 : 1) 지프형 자동차세 인상 문제, 2) 민간 기업 통신장비구매시장에의 미국업체 참여를 한국정부가 보장, 3)미국산 쌀 수입 문제, 4) 철강제품 반덤핑 연례재심 : 철강의 대일수출가격 자료 제출 요구, 5) 한국기업의 미국 PCS사업 참여의 규제
쟁점	한미 자동차협상과 후속 협상 전망 -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향후 자동차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음
전망	한미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이 높음 - 1996년 9월 협상 타결 직후 켄터 USTR 대표는 자동차 협정의 준수 여부를 내년 6월까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USTR에 지시 - 주된 쟁점은 지프형 자동차세의 증가 문제를 비롯한 자동차세율 체계가 될 것임. 한미통상관계 전망 :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- 식용 중국쌀 수입(1996년 수입분 71,000톤)의 축소 및 미국산 쌀의 일부 수입 가능성 - 민간 통신장비 구매시장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난항이 예상됨 - 미국에서의 PCS사업 참여 문제는 우리의 통신시장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- 철강제품 가격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

9. 홍콩의 중국 반환

1997년 7월부로 홍콩은 중국의 홍콩 특별구로 전환

○ 중국 반환 일정 개요 및 홍콩의 경제적 규모

- 1841년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 전쟁 결과 홍콩섬은 영국 점령, 이후 1898년, 홍콩섬과 구룡반도 일대의 新界지역에 대한 영국의 99년간 조차권 인정
- 1984년 조인된 영국과 중국간의 「홍콩반환협정」에 따라 조차권이 끝나는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은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의 「홍콩 특별구」로 바뀜
- 홍콩의 경제적 규모 : 인구 621만명, 1인당 소득 23,000달러, 외환보유고 600억 달러(세계 6위), 교역량 4,200억 달러, 증시 규모 세계 8위

현재 거시 경제는 대체로 안정, 사회분위기는 어수선

○ 현재의 홍콩 경제 분위기

- 거시경제 : 대체로 안정적임, 그러나 내구성 소비재와 부동산 경기는 바닥세
- 사회분위기 : 영국, 싱가포르 등지로 이민 희망자 폭증
- 해외 투자 : 홍콩으로의 투자 확대(중국 기업, 해외 화교자본)와 홍콩내 자본의 해외 이전이라는 두 가지 양상 혼재
- 외국 기업 : 금융기관의 경우, 현행 홍콩법상 지점설치를 위해서는 1년간의 사무소 경력이 필수적이므로 중국 반환 이전에 지점 허가를 위한 사무소 설치 급증, 대만계 및 영국계 자본의 이탈 현상, 일본과 미국 자본은 관망세

향후 1국 2체제 존속

○ 향후 홍콩의 위상

- 중국의 입장 :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바람.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「1국가 2체제」원칙을 고수할 것임
- 경제 환경의 변화 : 그러나 법규, 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, 부정부패 단속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예상

한국은 對중국 교두보로 적극 활용 필요

○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

- 對중국 진출의 교두보 : 홍콩은 중국 경제, 또는 중화경제권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고 중국계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임. 따라서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 투자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홍콩을 교두보로 하는 전략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
- 인허가 사항 : 「1국가 2체제」를 표방하고 있으나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은 본질적으로 중국 법체계에 따른 경제 활동의 통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. 따라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특허권 등 경영 활동 관련 각종 권리는 조속히 습득하여야 함